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韓, 가계부채·환율 '변수'

美연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FOMC, 금리 5.25~5.50% 유지
파월 “물가·고용시장 균형 관전”

韓, 美 인하 여부 따라 방향 전환
금융·외환 등 변수에 이달 동결
이 총재 “인하, 깜빡이 컨 상태”

“금리인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다.”

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8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보고 데이터를 쌓은 뒤 (금리인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표 안정적에도 금리동결 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은 2019년과 비슷해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용시장의 냉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증가했던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월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연준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5일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5월 97만8000건 늘었던 신규일자리 고용은 올해 7월 12만2000건으로 줄었다.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치수던 임금 수준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0년 4월 전년대비 7.9% 상승에서 올해 6월 기준 3.9%로 낮아졌다.

파월 의장은 “신규 일자리 고용의 경우 2019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임금상승률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냉각을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동결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물가상승률도 목표치까지 충분히 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물가상승률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개인소비자지출(PCE) 물가지수

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 6.8%까지 올랐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6월 2.5%로 낮아졌다. 다만 2019년 물가상승률 1%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2019년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물론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란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물가상승률 둔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의 두가지 목표인 ‘물가안정’과 ‘최대고용’ 중에서 ‘최대고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대고용은 현실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대에서 올해 5월부터 4%대로 올랐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서서히 최대고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월 의장은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성장률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노동시장이 현재 조건으로 냉각된다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물가와 고용시장의 균형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더라도 경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 외 고용지표 둔화에 따라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韓, 9월 이후 금리인하 논의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금리 인하 ‘깜빡이’를 컨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앞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금융·외환 변수가 많아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9월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8.5원 하락한 1368원에 개장했다. 연준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격히 하락했지만 여전히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해 환율 변동폭을 더 키우진 않을 것이라 설명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557조4116억원이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5조26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회복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늘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I 거품론 논란 속... IT업계 “AI로 인한 산업변혁, 이미 시작됐다”

골드만삭스, AI 효율성 의문 제기 업계, 업무 자동화·AI 활용 급증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용 기대

기대에 못 미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두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대두하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AI 거품론에 IT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 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AI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AI 거품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도리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두 중인 미국발(發) IT·반도체 기업들의 AI 거품론은 지난달 투자



31일(현지시간) 미국 덴버에서 열린 그래픽 컨퍼런스 시그나프에 참석한 존스 앤비디아 CEO가 “생성형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1인 1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선언했다. /엔비디아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AI 관련 보고서와 MS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에서 비롯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다른 아세모글루 MIT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회의론을 펼쳤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AI에 노출된 작업의 단 4분의 1만이 향후 10년 내 효율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AI가 전체 작업의 5% 미만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AI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개발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난 2분기 실적은 AI 거품론에 불을 붙였다. MS는 지난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47억달러(약 89조 원), 순이익은 220억달러(약 30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지난해 보다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5%, 순이익은 10% 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AI 운영의 핵

심 부분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사업 매출 성장률이 29%에 그쳤고 AI 서비스 성장률은 8%p로 나타나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

AI 거품론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가시적인 영역 밖인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AI 활용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탓에 관련 IT 기업들의 기업 솔루션 개발에서 AI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앞서 ‘텔 테크놀로지스 월드’에 참석한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의 도입과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

한 기업 업무자동화에 관심을 보인다”며 “앞으로 모든 컴퓨팅 기술은 언어 인터페이스를 가진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쉽게 업로드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GPU 중심 컴퓨팅 시대(GPU-Centric Computing)가 올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자사가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패브릭스(FabriX)와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소개한 바 있다.

산업계 및 업무 영역 외 개인의 삶에서 AI의 역할 또한 커진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IoT 기술 및 개인 모바일 기기와 AI의 결합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독점 예방 실태조사 착수

AI시장 경쟁제한 정책 파악 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정부가 AI(인공지능) 시장 거래관계와 경쟁 현황 파악에 나섰다. AI 기술 특성상 소수 거대 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큰 만큼 AI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AI 분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시장은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전세계 GD

P가 7%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

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EU(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

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곧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